

유네스코 인포페이퍼

2026.3.12. 제2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생성형 AI 시대, 문화다양성 협약의 전략적 전환

제19차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의 디지털 규범 논의

핵심 요약

-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문화 콘텐츠의 창작·유통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제19차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2026.2.17-20, 이하 제19차 정부간위원회)는 이러한 기술 변화가 야기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관련 정책 과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 제19차 정부간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에 대한 전문가 검토그룹'이 제시한 권고안의 이행 진전을 점검하는 한편, 2017년 채택된 디지털 환경 관련 운영지침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였으나 문안 채택은 유보하였다.
-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 보호와 관련한 규범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의정서 제정 가능성을 포함한 법적 선택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문화다양성 협약의 디지털 대응 논의는 단기 규범 조정과 중장기 법적 발전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01. 배경: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는 문화 유통

디지털 전환과 문화 콘텐츠 유통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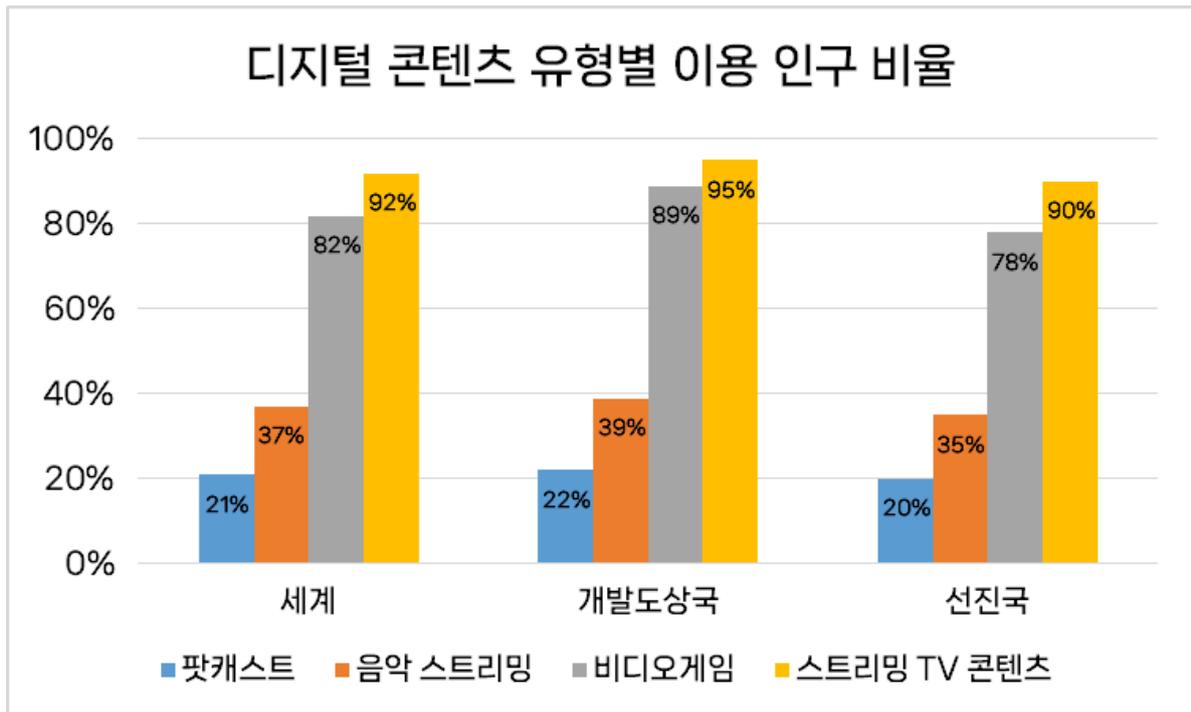
2005년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은 협약 당사국의 문화산업·창작 생태계의 보호·육성 정책 공간 보장을 핵심 목표로 발전해 왔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국가의 문화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작동하며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균형 있는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규범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구조는 디지털 플랫폼과 AI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플랫폼 기반 콘텐츠 유통이 확대되면서 콘텐츠 접근과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발견 용이성(discoverability) 역시 플랫폼 알고리즘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로 변천하고 있다. 동시에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은 창작 과정에도 변화를 가져오며 기존 문화정책 프레임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문화경제의 구조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제19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유네스코가 발표한 글로벌 보고서 '창의성을 위한 문화정책의 재구성: 공유하고, 행동하고, 함께 만든다'(2026)에 따르면, 글로벌 문화상품 교역 규모가 2023년 기준 약 2,540억 달러에 육박하며 문화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다.^[1]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문화 유통 구조가 확산되면서 콘텐츠의 가시성과 시장 접근이 플랫폼 알고리즘과 디지털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콘텐츠 이용 구조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 콘텐츠 소비 양상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출처: 유네스코, '창의성을 위한 문화정책의 재구성: 공유하고, 행동하고, 함께 만든다'(2026)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에서 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문화 콘텐츠 소비는 스트리밍 TV 콘텐츠(약 92%)와 비디오 게임(약 82%)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음악 스트리밍(약 37%)과 팟캐스트(약 21%) 등도 주요한 디지털 콘텐츠 유형으로 나타난다.^[2]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 콘텐츠 소비가 스트리밍 서비스와 게임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이용 환경은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 접근성과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AI 확산이 던진 정책적 질문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19차 정부간위원회는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AI 확산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새로운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유통 구조의 확대,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 콘텐츠 간 관계 설정, 국가 간 디지털 대응 역량 격차 등이 주요 정책 쟁점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정책 환경이 전통적 문화정책을 넘어 플랫폼 규율, 데이터 거버넌스, AI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재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02. 주요 논의와 쟁점: 문화다양성 협약의 디지털 대응 동향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다양성 협약 대응 논의의 전개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문제는 최근 문화다양성 협약 논의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플랫폼 기반 콘텐츠 유통 구조의 확대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문화 콘텐츠의 창작·유통·접근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문화정책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기술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회원국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제9차 문화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2023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검토그룹(Reflection Group, 이하 검토그룹)' 설치를 권고하였으며,^[3] 해당 그룹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디지털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18차 정부간위원회(2025년)에서는 총 11개의 권고안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었으며,^[4] 이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디지털 환경 대응 논의의 주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검토그룹'의 권고안 (이하 디지털 환경 권고안)	
구분	핵심 내용
규범 대응 (1번 권고안)	디지털 환경 및 생성형 AI 대응을 위한 추가의정서 채택 (1번 권고안)
정보 공유 (2-3번 권고안)	디지털 문화 정보 수집·공유 체계 강화(2번 권고안) 문화다양성 협약 국가보고서(QPR)* 개정을 통한 AI·콘텐츠 가시성 정보 반영(3번 권고안)
협의·옹호 (4-6번 권고안)	정부·민간·시민사회 협의 프레임워크 구축(4번 권고안) 문화다양성 보호 옹호 활동 지원 확대(5번 권고안) 책임 있는 디지털 문화 이용 인식 제고(6번 권고안)
역량 강화 (7-10번 권고안)	국가 디지털 문화 역량 강화 계획 수립(7번 권고안) AI 반영 예술교육 커리큘럼 개편(8번 권고안) 디지털 문화 분야 유네스코 석좌 지원(9번 권고안)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10번 권고안)
유네스코 역할 (11번 권고안)	AI·문화 분야 국제 협력 및 조정 기능 강화(11번 권고안)

*문화다양성 협약 국가보고서: Quadrennial Periodic Report(QPR),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문화다양성 협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4년마다 보고하는 공식 문서로, 문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국이 문화다양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핵심적인 도구이다.

디지털 환경 권고안 채택 경과

검토그룹이 아래와 같이 제시한 권고안 가운데 2-11번 권고안은 제18차 정부간위원회 및 제10차 당사국 총회를 거쳐 채택 및 승인되었으며, 현재 이행 모니터링 단계에 들어가 있다. 해당 권고는 디지털 문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국가 디지털 문화 역량 강화, AI·문화 협력 확대,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문화다양성 협약의 디지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1번 권고안(디지털 환경 및 생성형 AI 대응을 위한 추가의정서 채택)은 문화다양성 협약 체계의 법적 확장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회원국 간 신중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채택이 보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19차 정부간위원회는 이미 채택된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문화다양성 협약의 디지털 환경 대응을 위한 규범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였다.

권고 이행의 초기 진전과 구조적 한계

이번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일부 권고 이행의 초기 진전이 확인되었다. 문화다양성 협약 국가보고서(QPR) 개정 작업이 개시되어 AI 및 디지털 환경 관련 정책 정보를 보고 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기술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AI·문화 협력 분야에서도 초기 연구와 협력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정보 공유 체계와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핵심 과제는 자원과 인력 제약으로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협약의 디지털 대응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정책 권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개정 논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디지털 대응은 그동안 2017년 채택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6] 그러나 생성형 AI, 대규모 추천 알고리즘, 플랫폼 집중 구조 등 기술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 운영지침이 시대에 뒤쳐졌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제19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운영지침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특히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 콘텐츠의 관계 설정, 플랫폼 기반 환경에서의 콘텐츠 가시성 확보, 데이터 활용의 공정성 등의 정책 쟁점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다만 개정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부간위원회는 즉각적인 문안 채택 대신 회원국 서면 의견 제출, 온라인 협의, 수정 초안 회람 등 단계적 협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7] 이에 따라 운영지침 개정 논의는 향후 추가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이정서 논의와 '이중 트랙' 구조

한편 문화다양성 협약의 디지털 환경 대응과 관련하여 추가이정서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고 있다. 이는 검토그룹 1번 권고안과 연계된 사안으로, 제10차 당사국 총회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디지털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선

택지를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추가의정서 등 구속력 있는 문서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사무국에 요청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8]

이에 따라 현재 문화다양성 협약의 디지털 대응 논의는 운영지침 개정을 통한 단기 규범 조정과 추가의정서 가능성 검토라는 중장기 규범 발전 논의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제19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추가의정서 검토를 중장기 과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운영지침 개정을 통한 점진적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 협약의 디지털 대응은 단기적인 규범 조정과 중장기적인 법적 발전 가능성을 병행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03. 정책 동향과 시사점: 디지털 거버넌스로 확장되는 문화정책

기술 환경 중심 논의로의 전환

이번 19차 정부간위원회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논의 축이 전통적 문화정책 중심 접근에서, 플랫폼·데이터·AI 등 기술 환경을 고려한 거버넌스 논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 보호 문제는 플랫폼 기업과 AI 기술의 영향력, 콘텐츠 가시성, 데이터 활용의 공정성 등과 결합된 정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국가 간 대응 역량 격차 역시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정책 쟁점의 부상

생성형 AI 확산과 플랫폼 기반 콘텐츠 유통 구조의 확대는 협약 논의의 핵심 쟁점을 재구성하고 있다. 제19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의 영향력, 인간 창작물 보호, 데이터 활용의 형평성 문제가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되었다. 동시에 다수의 개도국은 AI 대응 역량과 자원 격차가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역량 강화와 국제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환기의 전략 공간과 한국의 선택

제19차 정부간위원회 논의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디지털 전환 대응의 초기 적응 단계를 넘어 규범적 재구성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운영지침 개정 논의와 중장기 규범 발전 가능성이 병행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협약의 디지털 대응이 기술적 보완을 넘어 규범적 재설계 단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문화다양성 협약이 디지털 문화 거버넌스 논의의 주요 국제 규범 중 하나로 발전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러한 전환기에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반과 AI 활용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의 정책 기여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 플랫폼 기반 문화산업과 AI 활용 분야에서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협약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전략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운영지침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 환경의 콘텐츠 발견 가능성, 창작자 권리 보호, 데이터 활용 원칙 등에 관한 정책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한다. 둘째, 권고 이행 단계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문화 역량 강화와 AI·문화 협력 분야의

시범적 이행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국제 논의와 연계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문화산업 정책, AI 거버넌스, 플랫폼 규율을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협약의 디지털 전환 논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략을 모색한다. 이러한 대응은 협약 이행을 넘어 향후 문화다양성 분야 글로벌 규범 논의에서 한국의 정책 기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04. 참고문헌

- [1] [UNESCO, Re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 We Share, We Act, We Build\(2026\)](#), p.124.
- [2] [UNESCO, Reshaping Policies for Creativity: We Share, We Act, We Build\(2026\)](#), Figure 3.2, p.68.
- [3] [UNESCO, Resolution 9.CP.11,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9th, Paris, 2023.](#)
- [4] [UNESCO, Recommendations of the Reflection Group on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 the digital environment\(Annex1\).](#)
- [5] [UNESCO, Decision 18.IGC.7,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18th, Paris, 2025.](#)
- [6] [UNESCO, Operational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2017\).](#)
- [7] [UNESCO, Decision 19.IGC.7,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19th, Paris, 2026.](#)
- [8] [UNESCO, Resolution 10.CP.8,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10th, Paris, 2025.](#)

유네스코 인포페이퍼는 국내 정책 현안과 관련된 유네스코 의제를 알기 쉽게 분석·정리한 정보 소식지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연락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의제정책센터 / ap.center@unesco.or.kr

